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22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년 10월 8일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9년 10월 22일

라. 상정일자: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19. 10. 22.)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 제안이유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1,626명 → 1,641명 (+15명)

- 집행기관의 정원: 1,595명 → 1,610명 (+15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1명 → 31명 (변동없음)

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3조 관련 별표 3)

- 정원 총계: 1,626명 → 1,641명 (+15명)
- 일반직 계: 1,621명 → 1,636명 (+15명)
 - 5급: 70명 → 71명 (+1명)
 - 6급 이하: 1,541명 → 1,555명 (+14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19. 8. 28. ~ 9. 17.)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배금택)

가. 개정 취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개정안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와 증가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 지방임기제공무원(의사)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찾·동 방문간호사의 정규직 적정인력

확충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626명에서 1,641명으로 15명 증원
 - 집행기관의 정원을 1,595명에서 1,610명으로 15명 증원
- [안 제3조 관련 별표 3] 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 정원을 1,621명에서 1,636명으로 15명 증원
 - 5급 정원을 70명에서 71명으로 1명 증원
(보건소 5급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1명 증원)
 - 6급 이하 정원을 1,541명에서 1,555명으로 14명 증원

다. 종합 의견

- 보건소 지방임기제공무원(의사) 직급 상향 조정
 - 5급 정원을 70명에서 71명으로 1명 증원한 것은 보건소 6급 지방임기제공무원(의사) 1명의 직급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와 방화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보건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임.

<표 1. 보건소 의사 인력 현황>

직급	현재 정원	담당업무(인원)
의무사무관 (5급)	6	1차 진료실 진료의사(2) 결핵실 진료의사(1) 예방접종실 진료의사(1) 대사증후군·금연상담의사(1) 화곡보건분소 진료의사(1)
보건진료주사 (6급)	3	모성실 진료의사(1, 결원) 치과의사(1) 한의사(1)

○ 찾·동 방문간호사 정규직 인력 충원에 따른 6급 이하 정원 조정

- 6급 이하 정원을 1,541명에서 1,555명으로 14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새로운 도약과 마을 중심의 구민건강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하여 동 주민센터 방문간호사의 정규직 적정인력 확충을 위한 것임.
- 고령화, 노인인구 및 독거 노인가구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요구가 증대되고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운영 중인 찾·동 방문건강관리 인력의 처우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 2019년 하반기 찾·동 방문간호사 15명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신규채용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보건소 6급 정원의 직급 상향 계획과 함께 6급 이하 정원 14명 증원을 상계 조정하여 총 정원 1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임.

○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계

-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15명을 증원할 경우 인건비 예산은 연간 5억 515만 7천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표 2. 인건비 추계의 상세 내역>

구분	순증인원	비용	산출내역	비고
(합계)	15명	505,157천 원		
임기제5급(의사) [직 급 조 정]	-	10,157천 원	59,188,000원-49,031,000원	임기제(의사) 5급 및 6급 연봉차액(연봉하한액)
간 호 직 [순 증]	15명	495,000천 원	33,000,000원 × 15명	8급/시비 75% 보조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에 따른 연봉하한액 기준
간호직 신규 공무원(찾·동 방문간호사) : 인건비 시비 보조(75%)

○ 보건의료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

-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증가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보건의료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 조정이므로 이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인력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 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채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